

양향자 후보의 허위·왜곡 게시물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소통단장인 김현 의원은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콘텐츠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경기도지사 후보인 추미애 후보를 공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실제 정치·사회적 사건의 경과를 왜곡하거나 특정 인물에게 근거 없이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2018년 이른바 ‘드루킹 특검’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건은 당시 네이버 측의 업무방해 고발을 계기로 수사가 확대된 사안으로, 이를 추미애 후보와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게시물은 마치 추미애 후보가 해당 사안의 직접적 원인 제공자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른바 ‘윤석열 대망론’ 역시 당시 정치 상황과 검찰개혁 국면, 언론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된 정치적 현상임에도, 이를 단순히 ‘추윤갈등’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일방적 정치 해석에 불과합니다.

아울러 게시물에서 언급된 “법원과 검찰을 때려잡았다”, “대통령의 죄를 봐줬

다” 등의 표현 역시 객관적 근거가 없는 자극적 주장입니다. 특히 추미애 후보가 대통령의 범죄를 은폐하거나 수사를 방해한 사실은 확인된 바 없으며, 이를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심각한 왜곡에 해당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국민소통단은 선거 시기 SNS를 통한 허위·왜곡 정보 유포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공당의 후보자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왜곡된 해석을 사실처럼 유포하는 행위는 더욱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국민소통단은 관련 법률 검토를 거쳐 양향자 후보의 해당 게시물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선거 과정에서 허위·왜곡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